

사회

심사위원 “고친 채점표 서명하라더라”

광주시교육청 공립학교 특채 교사 채용 논술 채점표 조작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으로 특채하는 과정에서 탈락한 교사를 합격시키려고 심사위원까지 속여가며 채점표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2월 실시한 사립교사 대상 공립특채 논술시험에서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한 교사는 15일 “당시 교육청 관계자가 논술 채점점수합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 이를 믿고 새로운 채점표에 다시 서명한 것이 마치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비춰져 억울하다. 결국 속았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지난 2월22일 광주 화정중학교에서 치러진 공채시험 과정에서 해당 11명의 응시 교사가 제출한 논술 답안지를 채점해 익명으로 표시된 교사들의 점수란에 평점을 적어놓고 자필 서명한 후 시교육청 교사 관계자에게 제출했다. 시험은 서류심사, 수업시연, 논술, 면접으로 진행됐다.

그러나 교사장을 나온 뒤 교육청에서 뒤늦게 전화를 걸어와 “심사위원들의 점수 통계에 문제가 생겼다”며 시교육청으로 와 줄 것을 요청했다. 논술채점을 한 심사위원 5명의 매긴

점수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계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였다.

시교육청을 찾은 그는 교사 관계자가 “오류가 생긴 통계를 수정했다”는 말만 믿고 별다른 의심없이 새로 제시한 채점표에 서명했다고 한다.

그는 “당시 교사 관계자가 내가 애초 서명해 제출한 원 채점표를 보여 주지 않아 새로운 채점표에서 어떤 부분이 수정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나머지 논술

채점위원 4명도 새롭게 작성된 채점표에 서명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결국 논술과목 점수를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과학기술부 감사결과 지적됐다.

교과부 감사팀은 지난 12일 광주시 교육청에 보낸 질의서에서 “올해 특채 사립교 교사 5명을 특채하는 과정에서 음악 과목의 합격자를 바꾸려고 사후에 채점표를 바꾼 사실이 드러났

다. 특정 과목 1위였던 교사의 논술 점수를 낮추는 방법으로, 애초 2위로 탈락했던 교사를 합격시켰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교과부는 채점표 조작과 합격자 변경이 조직적으로 이뤄졌는지 조사중이다. 교과부는 채점표를 고친 행위를 공문서 위조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한 인사 비리로 보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시교육청 목록부담

전교조 “이번 사건은 사학 비리서 기인”

광주시교육청이 사립학교 교사를 공립으로 특채하면서 탈락자를 바꿔 치기해 합격시킨 것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가운데 전교조가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은 정의로움 교사들을 쫓아낸 비인간적인 사학의 부당한 처사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시교육청은 교육감이 직접 나서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여론에도

15일 침묵으로 일관했다. “교과부 감사 결과에 따라 이번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는 원론적 입장만을 내놓은 상태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보도 자료에서 “이번 사안은 공립으로 장기간 과정에 있던 대광여고 교사들을 학교측의 요구와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공립 특채를 통해 채용한 것으로

전교조만을 위한 특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어 “시교육청 관료들이 사립교사 특채 전형을 정정당당하게 진행하지 않고 형식적 절차주의에 빠져 (경쟁률을 맞추기 위해)들러리 교사를 세운 것은 해당 교사에게도 상처를 준 것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기회에 사학법인의 부실한 정원 관리 폐해가 교육청과 공립학교에 전가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인화학교 이사장 영장 기각

성폭력 대책위 강력 반발

광주지법 영장전담 이재석 부장판사는 15일 인화학교 성폭행 가해자의 합의금을 법인 예산으로 지원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인화학교 이사장 강모(67)씨와 이사 정모(51)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사장 등이 횡령한 돈을 변제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씨 등은 2008년 성폭행 가해자인 법인 측근의 개인 합의금 3000만원을

법인에서 지원하고 2006년에는 법인 설립자가 후원금으로 기부한 7500만 원을 다른 회계로 전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인화학교 성폭력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 조사에서 통장, 수표, 회의록 등 증거물을 근거로 신청된 구속영장이 왜 기각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며 “학생 장학금을 불법으로 전용하고 성폭행 사건을 은폐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사장 등 임원 2명에 대한 최소한의 법적 책임을 묻는데 법원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고흥서 육군 상병 총기 자살 시도

가혹행위 추정 메모 발견... 출혈 심해 위독

가혹행위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되는 육군 장병이 총기로 자살을 시도하다 부상을 입어 군 당국이 진상 조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군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30분께 고흥군 포두면 남성리 육군 모 부대 소초에서 이모(23) 상병이 총기로 자살을 시도해 부상을 입었다.

이날 이 부대는 해안가 경계 취약 지역에서 매복작전을 벌인 후 복귀했으며 이후 이 상병이 실탄이 장전된 총기를 들고 소초에 들어가 자살을 시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병

은 총소리를 듣고 소초에 달려 온 동료 장병에게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순천 성가톨릭병원을 거쳐 광주 전남대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나 출혈이 심해 위독한 상태다.

이 상병의 소지품에서는 가혹행위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발견됐다.

군 당국은 헌병대를 부대로 보내 이 상병이 실탄을 소지하게 된 경위와 가혹행위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에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檢 “내사 관행 바꾼다”... 경찰 반발

“체포·구속, 주거지 압수수색 반드시 입건 후 실시”

검·경 수사권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검찰이 암묵적으로 이뤄지던 불법적 내사 관행을 바로 잡겠다고 나서 또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 내부의 관행을 고치겠다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찰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돼 내사 범위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온 검찰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5일 실질적 수사 활동을 내사로 취급하는 등 일부 부적절하게 운영돼 온 검찰의 내사 관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우선 실제 수사활동이 이뤄졌을 경우 ‘내사사건’이 아닌 ‘수사사건’으로 관리함으로써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체포·구속, 주거지 압수수색 등 인권침해 소지가 큰 수사활동은 반드시 입건 후 실시하도록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실질적으로 수사활동은 이뤄졌으나 입건에 이르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고등검찰청이 해당 사건 수사의 착수·진행·종료의 적정성, 인

권침해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게 된다.

한편 검찰이 수사 주체성 확보 차원에서 경찰청 수사국을 대검찰청에 상응하는 조직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내놴다. 경찰청은 본청 수사국에 경무관급 수사기획관을 만들고 범죄정보과를 신설하는 등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을 15일 밝혔다.

새로 생긴 수사기획관은 경찰청 수사부서인 사이버대대대응센터, 지능범죄수사대, 특수수사과와 일선의 중요사건을 수사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집회시위나 선거사범 등은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경찰의 입건 기준을 수립해 중요사건 발생 때 초동수사 단계부터 사건을 지휘하도록 했다.

경찰은 앞서 경무관급 인사에서 기획수사심의관이 수사구조개혁단장을 겸직하던 체제를 수사기획관과 수사구조개혁단장으로 분리했다. 수사기획관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기획관 직제와 대응한다.



광주 총인사실 수사

참여업체 압수수색

광주시에 982억원짜리 총인(TP) 저감시설 시공사 선정과정을 수사중인 검찰이 공사를 수주한 대립건설사업 참여업체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15일 광주지검과 해당 업체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대립건설사업에 참여한 A업체 본사에 수사관들을 보내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 내용을 분석중이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어떤 자료를 왜 압수했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은 1차적인 수준”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그동안 녹취파일 분석에 매달렸던 검찰이 업체들을 상대로 업체 자금 흐름을 살펴보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일부 확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나무 주걱에 맞았다며 고소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주방 직원에게 나무 주걱을 던져 상해를 가한 50대 식당실장이 처벌 위기.

○15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모 식당의 주방직원인 박모(여·53)씨는 지난 8일 오전 9시40분께 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식당실장 윤모(55)씨가 던진 나무 주걱에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고소장을 제출.

○경찰은 식당실장 윤씨가 자신이 쓰기 위해 받아 놓은 대야의 물을 박씨가 사용했다는 이유로 주걱을 던진 것으로 보고 윤씨를 불러 조사한 뒤 입건할 방침.

/김영민기자 kki@kwangju.co.kr



고가도로에 낀 트레일러

15일 오후 1시40분께 호남고속도로 서평주 나들목에서 25t 트레일러에 실린 23t 철제구조물이 높이 4.6m 고가도로 상판에 끼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이 일대가 1시간 동안 정체현상을 빚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오장원 광주여대 전 총장 구속

교비 15억 횡령·업체로부터 25억 수수... 동생은 석방

광주지검 강력부(이상억 부장검사)는 15일 거액의 교비를 횡령하고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오장원 광주여대 전 총장을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 전 총장은 지난 2003년부터 교비 15억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쓰고 대학 도서관과 본부 등 신축공사 과정에서 4개 업체로부터

25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오 전 총장의 동생이자 전 도서관장인 오모씨를 지난달 말 구속했지만 혐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동생의 진술에 따라 구속을 취소하고 석방한 뒤 오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또 최근 소집된 검찰 시민위원회도 오 전 총장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의

결을 냈으며, 오 전 총장은 자신의 혐의 사실을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총장은 가사도우미 급여를 학교 예산으로 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6월 사임했으며 동생인 오씨는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지난 7월 사직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정읍시장 상대 1억 청구소

범무법인 바른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벌금 80만원이 확정돼 시장 직위를 유지한 김생기(66) 정읍시장에게 소송을 맡았던 법무법인 바른

1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김 시장을 상대로 “시장직 유지 판결이 선고되면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 1억200만원을 지급하라”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대학편입 정원 대폭 증가!

대학편입이란? 수능결과를 뒤엎는 또한번의 찬스!!

재수	vs	편입
1학년입학 / 4년재학	출입시기	3학년입학 / 2년재학
고등교과목 전과목 (약 16과목)	준비과목	영어(인문) / 영어, 수학(자연)
각 군별 1회 지원	복수지원	대학별 지원(최대 20회 이상 복수지원 가능)

편입합격자 10명중 7명은 김영출신!

김영편입학원

광주동부경찰서 뒤(062) 227-8088

www.kimyong.co.kr 개강 : 12월 19일

2013학년도 대학편입을 위한 초석다지기 과정, 편입개론과정 대개강!
편입 1:1 문자상담 : 010-7766-1254